

# 10·15대책 공방... 與 “불법 조장하나” 野 “9월 통계 썼어야”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발표되지 않은 한국부동산원 9월 주택동향 통계를 활용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집값 통계를 제외한 채 대책을 발표해 억울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용산의 결정으로 밀어붙였다'는 제보도 있다고 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용산에서 수도권 규제지역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을 쫓아주려고 했다’ 이런 (국민의힘 측) 표현은 정치적 공세”라며 “(지난 10월) 13~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갈 때는 (한국부동산원 9월 통계) 발표되기 전이라 그 자료를 쓰기 어려웠다”고 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10월 13일부터 가동되고 있었다. 13일에 공표하지도 않을 것(자료)을 억지로 (반영)하면 그것이 조작”이라며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통계 발표 전에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야당 주장은 국민의 주거 복지와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공표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위법”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불법을 중용하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법지대였나보다. 그들의 주장처럼 하다가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올해) 7~9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스

## 민주당 “공표 전 부동산원 통계 사용하면 위법”

## 국민 “밀어붙이자는 용산 결정 때문” 제보도

월 집값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는 지역이 총 10곳이다. 수도권 10개 지역 주민들이 받지 않아야 될 제한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성실한 의무를 다하셨나”라고 물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실무자들이 국민에게 과급력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대해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

야기·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적 검토를 더 치밀하게 하셔야 한다. 피해 회복 권리 구제에 지금이라도 나서라”라고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책을 꼭 10월 15일 발표했어야 됐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지 않나. 규제는 국민의 권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전달인 9월 통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로 인해 ‘규제지역에 묶여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270만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명절 전부터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사실로부터 국토부는 (대책 발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것(대책)을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10월 15일 오전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여야 모두 집값도 안정되고 국민의 주거·민생 안정을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시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 보완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뉴스시스

## 정청래 “당정대 한몸 공동체”

정청래 “李 정부 성공 위해 승리... 반드시 단결”

민주 10~1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마무리

‘李 정부 성공·지방선거 승리 위한 결의문’ 채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겠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몸 공동체”라고 당부했다.

지역위원장들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관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2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선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당과 정부, 대통령실)는 원팀·원보이스로 앞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차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찰떡 호흡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총선, 대선 승리에 이어서 다가올 지선에서도 숫자 1(민주당 정당 기호)이 국민의 선택, 승리의 변주, 민주당 상징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지선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다.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

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 위도 없이 출범 5개월 만에 윤석열·국민의힘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3대 특검(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3대 개혁(언론·사법·검찰 개혁) 등 ‘민주 회복, 민생추경·민생입법 등 ‘민생 회복’, UN기조연설·APEC개최·정상외교 복원 등 ‘국격 회복’, ‘AI(인공지능) 3대 강국’, ‘코스피 5000 시대’ 미래비전 등희망찬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국정안정보다는 국정 발목잡기, 민생회복보다는 정쟁 골몰, 국익증대보다는 혐오 선동, 내란청산에는 내란동조, 개혁추진에는 반(反)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압도적 승리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할 것”이라며 “나아가 ‘완전한 정권교체’, ‘완전한 내란청산’, ‘완전한 국가정상화’를 이루고, 지방자치 30년 역사 이래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했다. /뉴스시스

## 서왕진 의원 “광주·전남 AI 생태계, 국가 전략사업 격상을”

광주·전남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 의원은 전날 경제부처 예산심의 회의에서 “광주와 전남이 연계해 학습·추론·활용 전주기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일관된 추진과 국가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이기도 한 서 의원은 광주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무산과 관련해 “담당부처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뒤집어 지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국가AI컴퓨팅 유치 무산... “국정과제 이행, 정책 일관성 실종”

국가 NPU 전용센터 등 3가지 제안 “정부의 적극 지원 필요”

안겼다”며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동안 집권여당은 광주 1호 공약이행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등 명백한 정책 엇박자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책사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민간 판단과 이익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정과제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는 실증·서비스, 전남은 컴퓨

팅·인프라를 담당해 AI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다”며 “광주·전남의 AI 생태계 구축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하고, 산업 현장에서 구축되는 AI 인프라를 실증·서비스·사업 확산과 연계해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광주가 제안한 ▲1단계 데이터센터 고도화와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구축 ▲AI 실증사업 확대

와 사업화 강화 ▲AI연구소 설립과 인재 양성 등 세 가지 과제를 정부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광주와 전남은 충분히 AI시범도시·실증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도 “검토 과정에서 지역연계성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광주 실증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남 기자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대통령 집무실, 다음달 청와대 복귀... 3년 7개월만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한다. 이로써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아직 구체적인 일정도 모두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순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참모들의 사무실 등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비서관실은 12일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보안시설 점검 등으로 일정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전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강 실장은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집무는 청와대에서 보지만 한남동 관저에서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새 관저로 삼청동 안가 등 여러 후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시스

서툰 걸음부터

느린 걸음까지

당신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